



SBS 여론조사 보고서

2014년 12월 29~30일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사회조사(이하 조사로 약칭)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한다. 본 강령은 조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연구의 윤리적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자는 조사과제 수행에서, 그리고 조사의뢰자 및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유지한다. 또한 조사자는 본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어긋나는 일체의 작업이나 조사과제를 거부한다.

제1조 조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2조 조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1. 조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2. 조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3. 조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결과를 해석하지 않는다.

제3조 조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

-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10) 질문지(질문내용) (11) 재통화 재방문-재발송 횟수 (12) 표본대체 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중치 부여 방식 (16) 기타 조사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제5조 조사의뢰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자는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 단, 조사의뢰자가 그 정보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을 경우, 또는 본 강령의 제7조에 의하여 배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사자는 조사기법·인력·장비 등의 한계 내에서 완수할 수 있는 조사과제만 수용한다.

제6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조사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
3. 조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4. 조사자는 연구를 기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5. 조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원 조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본 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목 차

I.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2
- 2. 응답자 특성표 3

II. 조사 결과

- 1.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4
- 2. 집권 3년차 핵심 국정 과제 7
- 3. 청와대 및 내각 인적 쇄신 필요성 10
- 4. 남북한 통일 필요성 12
- 5. 통일 시 우려점 14
- 6. 올해 정부 경제정책 효과 평가 16
- 7. 내년 경제 전망 17
- 8. 정부 구조 개혁 정책 우선 분야 19
- 9. 정부 노동시장 구조 변화 정책 평가 21
- 10.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평가 22
- 11. 공무원 연금 개혁 평가 24
- 12. 현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평가 25
- 13. 통진당 의원직 상실 결정 평가 26
- 14.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신뢰도 27
- 14-1. 검찰 수사 불신 시 추가 조치 방안(BASE: 수사 불신층 650명) 28
- 15.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필요성 평가 29
- 16.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시 선호 제도 31
- 17.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33
- 18. 정당지지도 36

▣ 별첨 1. 통계 편

▣ 별첨 2. 설문지

1. 조사 설계

조사 방법	
조사방법	가구 유선전화와 휴대 전화조사 병행

표본 설계																									
모 집 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 집 틀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생성한 유무선전화 Dual Frame (유선전화 49.1% : 휴대전화 50.9%)																								
표본크기	1,000 명																								
표집방법	유선전화: 가구 무작위 추출 후 지역/성/연령 비례에 따른 가구원 할당추출법 무선전화: 지역/성/연령 비례에 따른 개인 할당추출법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성/연령 분포를 이용한 칸 가중법																								
최대허용오차	±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15.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세부 내역</th> <th>유선</th> <th>무선</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비적격번호(결번/사업체/할당초과 등)</td> <td>5,642</td> <td>5,161</td> <td>10,803</td> </tr> <tr> <td>연결실패번호(통화중/부재중/안받음)</td> <td>1,052</td> <td>1,694</td> <td>2,746</td> </tr> <tr> <td>연결 후 거절 및 중도이탈 번호(R)</td> <td>2,815</td> <td>2,636</td> <td>5,451</td> </tr> <tr> <td>연결 후 응답완료 번호(I)</td> <td>491</td> <td>509</td> <td>1,000</td> </tr> <tr> <td>총 시도횟수</td> <td>10,000</td> <td>10,0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세부 내역	유선	무선	계	비적격번호(결번/사업체/할당초과 등)	5,642	5,161	10,803	연결실패번호(통화중/부재중/안받음)	1,052	1,694	2,746	연결 후 거절 및 중도이탈 번호(R)	2,815	2,636	5,451	연결 후 응답완료 번호(I)	491	509	1,000	총 시도횟수	10,000	10,000	20,000
세부 내역	유선	무선	계																						
비적격번호(결번/사업체/할당초과 등)	5,642	5,161	10,803																						
연결실패번호(통화중/부재중/안받음)	1,052	1,694	2,746																						
연결 후 거절 및 중도이탈 번호(R)	2,815	2,636	5,451																						
연결 후 응답완료 번호(I)	491	509	1,000																						
총 시도횟수	10,000	10,000	20,000																						

* 응답률: 비적격번호, 연결실패번호를 제외한 시도횟수 중 응답완료 수의 비율(I / (I + R))

조사 기간 및 기관	
조사기간	2014 년 12 월 29 일(월) 14 시 ~ 30 일(화) 22 시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TNS

2. 응답자 특성표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49.4
	대전/충남/충북	102	10.2
	광주/전남/전북	103	10.3
	대구/경북	103	10.3
	부산/울산/경남	157	15.7
	강원/제주	41	4.1
	성별	남자	493
여자		507	50.7
연령별	19~29세	181	18.1
	30대	196	19.6
	40대	215	21.5
	50대	195	19.5
	60대이상	213	21.3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3.3
	자영업	172	17.2
	블루칼라	119	11.9
	화이트칼라	237	23.7
	가정주부	232	23.2
	학생	103	10.3
	기타/무직	98	9.8
	무응답	7	0.7
소득준별	100만원 이하	129	12.9
	101~200만원	114	11.4
	201~300만원	183	18.3
	301~400만원	145	14.5
	401만원 이상	282	28.2
	무응답	147	14.7

* 응답자 특성별로 가중치 보정 후의 사례수를 기준으로 구성비 계산

1.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43.8%

Q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12.9%
다소 잘하고 있다	30.9%
다소 잘못하고 있다	25.0%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6%
모름/무응답	10.6%
잘함 : 43.8% 잘못함 : 45.6% -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3.8%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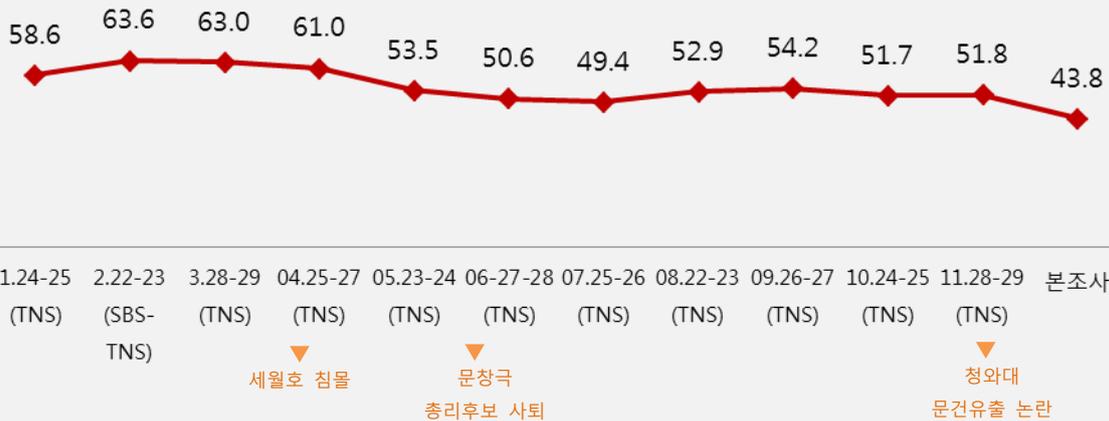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사례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전체		(1000)	43.8	45.6	전체		(1000)	43.8	45.6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42.1	48.2	직	농업/임업/어업	(33)	74.6	23.2
	대전/충남/충북	(102)	40.4	44.3	업	자영업	(172)	40.6	49.8
	광주/전남/전북	(103)	18.7	66.9	별	블루칼라	(119)	43.5	43.6
	대구/경북	(103)	58.9	32.6		화이트칼라	(237)	30.4	60.8
	부산/울산/경남	(157)	54.7	37.6		가정주부	(232)	56.5	34.0
	강원/제주	(41)	57.0	28.5		학생	(103)	23.5	55.9
						무직/기타	(98)	63.2	28.9
연령별	19-29 세	(181)	27.0	53.2	지	새누리당	(413)	79.5	15.1
	30 대	(196)	20.8	71.2	지	새정치민주연합	(215)	19.1	71.8
	40 대	(215)	34.0	55.5	정	정의당	(37)	4.5	95.5
	50 대	(195)	61.3	31.1	당	지지정당없음	(307)	20.0	60.7
	60 대이상	(213)	73.4	19.1	별				

- ⇒ '잘하고 있다'는 ▶ 대구/경북(58.9%), 부산/울산/경남(54.7%) ▶ 50 대(61.3%), 60 대이상(73.4%)
▶ 주부(56.5%) ▶ 100 만원이하 소득층(64.1%), 101-200 만원 소득층(64.0%) ▶ 중졸이하(70.7%), 고졸(5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잘못하고 있다'는 ▶ 광주/전라(66.9%) ▶ 20 대(53.2%), 30 대(71.2%), 40 대(55.5%)
▶ 자영업(49.8%), 화이트칼라(60.8%), 학생(55.9%) ▶ 301-400 만원 소득층(60.2%), 401 만원이상 소득층(58.2%) ▶ 대재이상(57.3%)에서 특히 높았음.

☞ TNS DataBase -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이(%)

◆ 2014년 국정 지지도 추이



* TNS로 표기된 조사는 TNS 자체 조사임

⇒ 지난 4 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50%대로 하락한 국정 지지도는 7.30 재보선 승리를 기점으로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무상 보육정책의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을 거치며 지지도가 하락해 최근 1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 변화 (SBS-TNS 여론조사)

		2014년 신년 조사 (2013.12.29-30)	취임 1주년 조사 (2014.2.22-23)	본조사
전체		57.9	63.6	43.8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51.8	60.7	42.1
	대전/충남/충북	66.5	73.9	40.4
	광주/전남/전북	26.8	44.7	18.7
	대구/경북	86.4	70.9	58.9
	부산/울산/경남	70.9	72.4	54.7
	강원/제주	66.0	67.7	57.0
연령별	19-29 세	41.5	38.1	27.0
	30 대	38.5	54.3	20.8
	40 대	56.3	58.0	34.0
	50 대	69.9	78.1	61.3
	60 대이상	82.1	86.2	73.4

⇒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취임 1주년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 상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TNS DataBase - 전임 대통령 집권 2년차 마감 시점 국정 지지도 비교(%)

	노무현 전 대통령 (2004.12.28~29)	이명박 전 대통령 (2009.12.30~31)	박근혜 대통령 (본조사)
집권 2년차 마감 시점 국정운영 지지도	37.7	49.8	<u>43.8</u>

- ⇒ 집권 2년차를 마감하는 시점의 국정지지도를 살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3.8%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높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차 마감 시점(2009년말)에는 UAE 원전 수주로 인해 국정 지지도가 단기간 내에 급등했던 상황이었음.

2. 집권 3년차 핵심 국정 과제

집권 3년차 핵심 국정 과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39.0%

Q 내년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39.0%
복지확대 및 사회 양극화 해소	16.9%
국민/정치권과 소통 확대	15.5%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13.8%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 민주화	7.2%
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정책	4.0%
모름/무응답	3.6%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 새해 핵심 국정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39.0%)' 이 1순위로 꼽히고 있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염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그 다음으로는 '복지확대 및 사회 양극화 해소(16.9%)'와 '국민/정치권과의 소통 확대(15.5%)',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13.8%)' 순으로 국정 과제를 꼽고 있어, 경제 활성화 외에도 복지, 사회 통합 및 소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및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 정치권과 소통 확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 민주화	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정책
전체		(1000)	39.0	16.9	15.5	13.8	7.2	4.0
권 역 별	서울/인천/경기	(494)	37.0	17.3	16.7	16.2	6.0	3.1
	대전/충남/충북	(102)	38.1	14.0	11.2	15.2	9.8	6.5
	광주/전남/전북	(103)	29.2	21.1	23.2	11.7	6.1	4.4
	대구/경북	(103)	48.7	15.1	14.0	11.7	5.2	4.5
	부산/울산/경남	(157)	46.7	17.1	8.5	8.2	11.9	4.4
	강원/제주	(41)	35.1	14.1	21.5	14.0	5.4	4.4
연 령 별	19-29 세	(181)	26.0	22.4	21.3	13.7	9.1	3.5
	30 대	(196)	27.3	27.7	20.8	14.3	6.9	1.5
	40 대	(215)	39.2	18.6	14.0	15.2	6.1	3.5
	50 대	(195)	48.9	9.3	11.1	14.4	7.9	3.2
	60 대이상	(213)	51.3	7.7	11.1	11.6	6.4	7.8
직 업 별	농업/임업/어업	(33)	56.0	5.2	6.7	20.6	0.0	7.8
	자영업	(172)	39.6	19.3	16.2	8.7	7.4	4.4
	블루칼라	(119)	38.7	13.4	15.6	16.2	9.3	2.6
	화이트칼라	(237)	27.7	21.6	22.9	14.7	8.0	2.5
	가정주부	(232)	50.0	14.4	10.0	13.6	4.4	3.9
	학생	(103)	31.3	19.3	17.9	16.1	7.5	5.3
	무직/기타	(98)	41.8	11.1	10.5	14.6	11.7	6.4
지 지 정 당 별	새누리당	(413)	51.4	11.3	10.2	11.4	6.4	6.1
	새정치민주연합	(215)	29.0	20.8	23.7	13.8	7.8	3.0
	정의당	(37)	2.2	34.0	17.6	20.0	19.8	2.3
	지지정당없음	(307)	34.7	18.8	16.2	16.6	7.0	2.0

-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7%) ▶여자(43.3%) ▶50 대(48.9%), 60 대이상(51.3%) ▶주부(50.0%) ▶100 만원이하 소득층(45.7%), 101-200 만원 소득층(47.5%) ▶중졸이하(50.6%), 고졸(42.7%) ▶새누리당 지지층(51.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0.7%)에서 특히 높았음.
- ⇒ '복지 확대 및 사회 양극화 해소'는 ▶30 대(27.7%) ▶201-300 만원 소득층(24.2%), 301-400 만원 소득층(22.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국민/정치권과 소통 확대'는 ▶광주/전라(23.2%) ▶20 대(21.3%) ▶화이트칼라(22.9%) ▶401 만원이상 소득층(19.6%) ▶대재이상(19.8%) ▶새정치연합 지지층(23.7%)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2.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TNS DataBase** - 최우선 국정과제 추이(%)

	13년 12월 29-30일 SBS-TNS 조사	14년 2월 22-23일 SBS-TNS 조사	본조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34.9	41.7	39.0
복지 확대 및 사회 양극화 해소	12.8	16.8	16.9
국민/정치권과의 소통 확대	19.1	12.2	15.5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16.3	9.8	13.8
중소기업 보호 및 경제 민주화	9.8	9.9	7.2
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정책	5.0	7.3	4.0

- ⇒ 본 조사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꼽혔으며 1년 전 조사와 비교할 경우에 그 수치도 상승(34.9%→39.0%)한 것으로 나타남.
- ⇒ 올해 들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부동산 대책, 가계소득증대세제 등)이 발표됐으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바램은 1년 동안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보임.

3. 청와대 및 내각 인적 쇄신 필요성

청와대 및 내각 인적 쇄신 필요성, '전면적인 인사개편' 43.3%

Q

집권 3년차인 2015년을 맞아 내각이나 청와대에 대한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	43.3%
몇몇 장관이나 비서관을 교체하는 수준의 소폭 개편이 적절하다	31.2%
인사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	11.5%
모름/무응답	14.0%

- 새해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43.3%)'고 보는 응답이 '몇몇 장관이나 비서관을 교체하는 수준의 소폭 개편이 적절하다(31.2%)'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사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5%로 전반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인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포함 전면적인 인사개편	몇몇 장관이나 비서관을 교체하는 수준	인사 개편이 필요하지 않음
전체		(1000)	43.3	31.2	11.5
권역 별	서울/인천/경기	(494)	43.2	29.3	12.7
	대전/충남/충북	(102)	48.4	35.8	5.7
	광주/전남/전북	(103)	51.0	28.7	5.4
	대구/경북	(103)	41.0	34.0	11.8
	부산/울산/경남	(157)	38.5	30.3	16.7
	강원/제주	(41)	35.5	45.3	7.3
연령 별	19-29 세	(181)	41.9	32.3	12.5
	30 대	(196)	57.0	28.0	6.0
	40 대	(215)	48.3	26.8	10.7
	50 대	(195)	37.6	31.4	16.3
	60 대이상	(213)	32.0	37.5	12.3
직업 별	농업/임업/어업	(33)	17.1	52.1	15.8
	자영업	(172)	48.0	26.8	14.7
	블루칼라	(119)	39.0	33.1	11.6
	화이트칼라	(237)	61.1	28.8	6.3
	가정주부	(232)	32.1	33.4	13.2
	학생	(103)	34.6	33.8	12.0
	무직/기타	(98)	43.6	24.4	12.9
지지 정당 별	새누리당	(413)	30.0	39.9	16.6
	새정치민주연합	(215)	60.5	26.7	5.0
	정의당	(37)	79.5	5.4	8.4
	지지정당없음	(307)	42.3	27.7	9.1

- ⇒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포함 전면적인 인사개편'은 ▶대전/충청(48.4%), 광주/전라(51.0%) ▶남자(49.3%) ▶30 대(57.0%), 40 대(48.3%) ▶자영업(48.0%), 화이트칼라(61.1%) ▶301-400 만원 소득층(52.6%), 401 만원이상 소득층(55.7%) ▶대재이상(51.5%) ▶새정치연합 지지층(60.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4.1%)에서 특히 높았음.
- ⇒ '몇몇 장관이나 비서관을 교체하는 수준'은 ▶60 대이상(37.5%) ▶101-200 만원 소득층(46.2%) ▶고졸(34.8%) ▶새누리당 지지층(39.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2.1%)에서 비교적 높았음.
- ⇒ '인사 개편이 필요하지 않음'은 ▶부산/울산/경남(16.7%) ▶50 대(16.3%) ▶201-300 만원 소득층(15.3%)에서 높게 나타남.

4. 남북한 통일 필요성

남북한 통일 필요성, '꼭 통일해야 한다' 59.8%

Q

선생님께서서는 장차 우리나라와 북한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통일해야 한다	59.8%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23.9%
통일할 필요 없다	14.8%
모름/무응답	1.5%

- 우리나라가 장차 북한과 '반드시 통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59.8%로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통일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23.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통일할 필요 없다'고 응답한 통일에 회의적인 입장은 14.8%로 가장 낮았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통일해야 한다	상관없다	통일할 필요없다			사례수	통일해야 한다	상관없다	통일할 필요없다
전체		(1000)	59.8	23.9	14.8	전체		(1000)	59.8	23.9	14.8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61.6	24.6	12.5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73.7	17.2	9.1
	대전/충남/충북	(102)	52.5	26.9	19.4		자영업	(172)	61.1	26.3	11.4
	광주/전남/전북	(103)	67.5	18.8	9.6		블루칼라	(119)	58.8	20.0	20.0
	대구/경북	(103)	56.2	17.4	26.4		화이트칼라	(237)	58.1	24.8	15.6
	부산/울산/경남	(157)	58.0	24.8	15.5		가정주부	(232)	57.7	24.0	16.0
	강원/제주	(41)	52.0	33.1	11.3		학생	(103)	54.4	28.3	16.3
연령별	19-29 세	(181)	49.6	27.2	21.5	정당별	무직/기타	(98)	67.9	18.5	10.8
	30 대	(196)	53.4	24.0	20.1		새누리당	(413)	59.8	24.1	14.5
	40 대	(215)	62.3	26.0	10.2		새정치민주연합	(215)	63.0	22.5	13.3
	50 대	(195)	64.8	22.7	11.5		정의당	(37)	70.1	23.5	6.4
	60 대이상	(213)	67.0	19.8	11.7		지지정당없음	(307)	57.5	22.2	18.0

- ⇒ '꼭 통일해야 한다'는 ▶광주/전라(67.5%) ▶남자(65.1%) ▶50 대(64.8%), 60 대이상(67.0%) ▶중졸이하(63.4%) ▶새정치연합 지지층(63.0%)에서 특히 높았음.
- ⇒ '상관 없다'는 ▶학생(28.3%) ▶101-200 만원 소득층(2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통일할 필요 없다'는 ▶대전/충청(19.4%), 대구/경북(26.4%) ▶여자(18.9%) ▶20 대(21.5%), 30 대(20.1%) ▶블루칼라(20.0%) ▶무당층(1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TNS Point** - 남북한 통일 필요성 추이 (%)

	남북한 통일 필요성		
	꼭 통일해야 한다	통일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	통일할 필요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SBS-TNS 여론 조사 (2005년 6월 9일)	66.1	22.1	10.8
본조사	59.8	23.9	14.8

- ⇒ 2005 년 조사 당시 남북한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본 조사에 비해 높았으며, '통일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 ⇒ 10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예전에 비해 통일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조금 늘어남.

5. 통일 시 우려점

통일 시 우려점, '남북간 경제력 차이와 북한 주민의 남하로 인한 사회적 혼란' 44.3%

Q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남북간 경제력 차이와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44.3%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35.0%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낄 문화적 이질감과 불편함	16.5%
모름/무응답	4.2%

- 통일을 가정 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으로 '남북간 경제력 차이와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44.3%)'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5.0%)'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많은 응답자가 '문화적 이질감과 불편함(16.5%)'보다는 통일에 대한 비용과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NS Point - 통일 필요성 평가 별 통일 시 우려점(%)

		통일 시 우려점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부담	문화적 이질감과 불편함	모름/무응답
남북한 통일 필요성	꼭 통일해야 한다	42.3	33.9	19.6	4.2
	상관없다	45.0	36.1	15.5	3.4
	통일할 필요없다	53.1	36.7	6.8	3.4
	모름/무응답	31.3	37.5	6.3	25.0

- ⇒ 통일에 대한 태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사회적 혼란을 가장 우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 ⇒ 특히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층에서 북한 주민의 남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북한주민 대거 남하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북한 주민에게 느낄 문화적 이질감과 불편함
전체		(1000)	44.3	35.0	16.5
지역 별	서울/인천/경기	(494)	45.1	35.1	15.9
	대전/충남/충북	(102)	46.9	31.5	18.1
	광주/전남/전북	(103)	37.8	35.0	20.2
	대구/경북	(103)	46.2	36.5	14.1
	부산/울산/경남	(157)	40.1	37.9	18.0
	강원/제주	(41)	56.8	28.0	12.1
연령 별	19-29 세	(181)	52.6	33.0	11.4
	30 대	(196)	40.3	38.5	18.6
	40 대	(215)	47.9	26.0	20.9
	50 대	(195)	42.9	36.2	17.3
	60 대이상	(213)	38.8	41.5	13.9
직업 별	농업/임업/어업	(33)	43.1	40.8	7.8
	자영업	(172)	36.2	33.8	24.3
	블루칼라	(119)	40.1	37.7	18.9
	화이트칼라	(237)	42.2	34.8	20.3
	가정주부	(232)	53.5	32.8	10.8
	학생	(103)	54.4	29.3	12.7
	무직/기타	(98)	39.6	42.6	10.9
지지 정당 별	새누리당	(413)	44.5	37.9	14.0
	새정치민주연합	(215)	45.9	32.3	19.7
	정의당	(37)	30.7	38.4	22.7
	지지정당없음	(307)	46.2	30.6	17.2

- ⇒ '북한 주민 대거남하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은 ▶여자(51.0%) ▶20 대(52.6%) ▶주부(53.5%), 학생(54.4%) ▶301-400 만원 소득층(47.6%) ▶고졸(47.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30 대(38.5%), 60 대이상(41.5%) ▶201-300 만원 소득층(40.4%)에서 비교적 높았음.
- ⇒ '북한 주민에게 느낄 문화적 이질감과 불편함'은 ▶광주/전라(20.2%) ▶남자(20.4%) ▶40 대(20.9%) ▶자영업(24.3%), 화이트칼라(20.3%) ▶새정치연합 지지층(1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올해 정부 경제정책 효과 평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효과 평가, '효과 없었다' 71.7%

Q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고,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대책이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올 한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매우 효과가 있었다	2.2%	효과 있음 : 20.1%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17.9%	
	별로 효과가 없었다	50.0%	효과 없음 : 71.7%
	전혀 효과가 없었다	21.7%	
	모름/무응답	8.2%	-

- 2014년 한 해 동안의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 71.7%(별로 50.0%+전혀 21.7%)로 '효과가 있었다(20.1%)'는 평가(매우 2.2%+어느 정도 17.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사례수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체		(1000)	20.1	71.7	전체		(1000)	20.1	71.7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17.9	75.7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25.3	55.6
	대전/충남/충북	(102)	19.1	74.0		자영업	(172)	17.8	80.5
	광주/전남/전북	(103)	11.5	72.2		블루칼라	(119)	20.6	70.3
	대구/경북	(103)	31.2	56.5		화이트칼라	(237)	13.2	84.2
	부산/울산/경남	(157)	22.9	70.1		가정주부	(232)	24.6	63.0
	강원/제주	(41)	31.5	62.5		학생	(103)	18.5	66.6
연령별	19-29 세	(181)	17.8	71.9	당별	무직/기타	(98)	29.1	59.4
	30 대	(196)	8.9	87.1		지 새누리당	(413)	36.4	55.3
	40 대	(215)	16.2	77.5		지 새정치민주연합	(215)	9.1	85.9
	50 대	(195)	25.1	68.1		정 정의당	(37)	2.2	97.8
	60 대이상	(213)	31.6	55.0		당 지지정당없음	(307)	8.9	79.2

- ⇒ '효과 있음'은 ▶대구/경북(31.2%) ▶50 대(25.1%), 60 대이상(31.6%) ▶주부(24.6%) ▶100 만원이하 소득층(25.9%), 101-200 만원 소득층(31.6%) ▶중졸이하(2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효과 없음'은 ▶서울/인천/경기(75.7%) ▶30 대(87.1%), 40 대(77.5%) ▶자영업(80.5%), 화이트칼라(84.2%) ▶201-300 만원 소득층(74.9%), 301-400 만원 소득층(80.2%), 401 만원이상 소득층(80.5%) ▶대재이상(77.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7. 내년 경제 전망

내년 경제 전망, '올해와 비슷할 것' 44.7%

Q 올해와 비교할 때 내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좋아질 것이다	17.7%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44.7%
나빠질 것이다	34.8%
모름/무응답	2.8%

- 내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44.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 전망이 34.8%로 '좋아질 것(17.7%)'이라는 낙관 전망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좋아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사례수	좋아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전체		(1000)	17.7	44.7	34.8	전체		(1000)	17.7	44.7	34.8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16.8	46.5	34.5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29.8	38.9	24.9
	대전/충남/충북	(102)	16.6	46.7	33.0		자영업	(172)	15.4	39.2	45.3
	광주/전남/전북	(103)	5.7	48.4	43.4		블루칼라	(119)	14.2	49.2	36.0
	대구/경북	(103)	28.6	41.6	24.2		화이트칼라	(237)	9.2	48.0	42.4
	부산/울산/경남	(157)	19.7	39.1	39.1		가정주부	(232)	25.7	43.5	25.1
	강원/제주	(41)	26.7	38.7	30.7		학생	(103)	9.7	58.9	30.4
					무직/기타	(98)	30.1	34.6	25.8		
연령별	19-29 세	(181)	11.3	56.1	32.1	정당별	새누리당	(413)	29.2	45.5	20.8
	30 대	(196)	6.8	42.8	50.0		새정치민주연합	(215)	9.1	47.5	42.0
	40 대	(215)	16.3	39.3	43.0		정의당	(37)	2.2	25.5	72.3
	50 대	(195)	21.0	42.9	34.1		지지정당없음	(307)	11.4	43.8	43.0
	60 대이상	(213)	31.7	43.9	15.3						

- ⇒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대구/경북(28.6%) ▶50 대(21.0%), 60 대이상(31.7%) ▶주부(25.7%) ▶100 만원이하 소득층(28.3%), 101-200 만원 소득층(29.8%)에서 비교적 높았음.
- ⇒ '비슷할 것'은 ▶20 대(56.1%) ▶블루칼라(49.2%), 학생(58.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나빠질 것'은 ▶광주/전라(43.4%), 부산/울산/경남(39.1%) ▶남자(38.1%) ▶30 대(50.0%), 40 대(43.0%) ▶자영업(45.3%), 화이트칼라(42.4%) ▶201-300 만원 소득층(41.0%), 301-400 만원 소득층(41.6%), 401 만원이상 소득층(4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TNS Point** - 내년 경제 전망 추이 (%)

	내년 경제 전망		
	좋아질 것이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SBS-TNS 조사 (2013년 12월 29일-30일)	25.3	52.1	18.3
본조사	17.7	44.7	34.8

⇒ 1년 전 같은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비해 국민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은 약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남. 앞 문항의 조사 결과대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고용 환경의 악화, 전월세가격의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가계의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임

8. 정부 구조 개혁 정책 우선 분야

정부 구조 개혁 정책 우선 분야, '공공분야' 31.6%, '노동 분야' 29.6%

Q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분야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개혁 등 공공 분야	31.6%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전성 제고 등 노동 분야	29.6%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학교 교육 개선 등 교육 분야	17.4%
금융 시장 내 경쟁 촉진, 외환 규제 완화 등 금융 분야	13.6%
모름/무응답	7.8%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세운 각 분야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개혁 등 공공 분야(31.6%)'와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전성 제고 등 노동 분야(29.6%)'인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공적연금 개혁안 논란, 비정규직 정책 등 올 한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한편,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학교 교육 개선 등 교육 분야'는 17.4%, '금융 시장 내 경쟁 촉진, 외환 규제 완화 등 금융 분야'는 13.6%였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공공 분야	노동 분야	교육 분야	금융 분야
전체		(1000)	31.6	29.6	17.4	13.6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35.5	27.5	15.7	14.6
	대전/충남/충북	(102)	25.2	38.4	12.9	13.1
	광주/전남/전북	(103)	25.5	38.0	15.5	9.3
	대구/경북	(103)	32.7	27.1	20.1	13.8
	부산/울산/경남	(157)	27.4	26.7	24.5	13.4
	강원/제주	(41)	28.2	28.0	21.6	12.7
연령별	19-29 세	(181)	22.8	36.7	21.2	11.3
	30 대	(196)	29.5	31.8	18.4	16.9
	40 대	(215)	41.0	25.6	20.0	9.9
	50 대	(195)	33.3	28.4	16.5	14.7
	60 대이상	(213)	29.9	26.5	11.7	15.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35.9	25.6	11.4	16.2
	자영업	(172)	34.5	34.3	12.2	9.4
	블루칼라	(119)	27.5	28.6	25.3	13.2
	화이트칼라	(237)	41.0	29.8	16.1	11.4
	가정주부	(232)	26.7	26.1	22.9	16.8
	학생	(103)	17.4	36.9	21.8	17.2
	무직/기타	(98)	33.2	24.7	5.3	13.5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13)	33.1	25.0	18.1	17.0
	새정치민주연합	(215)	32.4	35.6	19.7	8.8
	정의당	(37)	38.9	29.3	12.1	8.2
	지지정당없음	(307)	29.4	30.8	15.6	13.0

- ⇒ '공공 분야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서울/인천/경기(35.5%) ▶남자(38.1%) ▶40 대(41.0%) ▶화이트칼라(41.0%) ▶101-200 만원 소득층(35.6%), 401 만원이상 소득층(37.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노동 분야는 ▶대전/충청(38.4%), 광주/전라(38.0%) ▶20 대(36.7%) ▶자영업(34.3%), 학생(36.9%) ▶201-300 만원 소득층(32.9%) ▶중졸이하(34.6%) ▶새정치연합 지지층(3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교육 분야는 ▶부산/울산/경남(24.5%) ▶여자(20.7%) ▶블루칼라(25.3%), 주부(22.9%) ▶301-400 만원 소득층(21.2%)에서 비교적 높았음.
- ⇒ '금융 분야는 ▶30 대(16.9%) ▶새누리당 지지층(1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9. 정부 노동시장 구조 변화 정책 평가

정부 노동시장 구조 변화 정책 평가, '도움 안될 것' 54.0% vs. '도움될 것' 35.6%

Q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뽑고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대로 하면 정규직의 안정성만 악화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54.0%
정부 정책대로 정규직이 양보한다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5.6%
모름/무응답	10.4%

-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정규직의 안정성만 악화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54.0%로 과반수였음.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는 평가는 35.6%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도움안될 것	도움될 것			사례수	도움안될 것	도움될 것
전체		(1000)	54.0	35.6	전체		(1000)	54.0	35.6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58.8	31.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42.2	49.2
	대전/충남/충북	(102)	51.5	35.3		자영업	(172)	58.4	33.2
	광주/전남/전북	(103)	46.2	43.1		블루칼라	(119)	59.3	28.9
	대구/경북	(103)	45.4	44.4		화이트칼라	(237)	64.8	30.4
	부산/울산/경남	(157)	53.5	35.7		가정주부	(232)	39.0	45.4
	강원/제주	(41)	45.0	48.0		학생	(103)	70.7	23.3
						무직/기타	(98)	35.6	45.4
연령별	19-29 세	(181)	68.1	25.2	정당별	새누리당	(413)	37.3	48.2
	30 대	(196)	74.6	20.8		새정치민주연합	(215)	66.6	29.2
	40 대	(215)	59.0	34.1		정의당	(37)	86.9	9.2
	50 대	(195)	43.3	45.1		지지정당없음	(307)	61.1	27.7
	60 대이상	(213)	27.7	50.7					

- ⇒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는 ▶서울/인천/경기(58.8%) ▶20 대(68.1%), 30 대(74.6%), 40 대(59.0%) ▶자영업(58.4%), 블루칼라(59.3%), 화이트칼라(64.8%), 학생(70.7%) ▶201-300 만원 소득층(60.7%), 301-400 만원 소득층(57.2%), 401 만원이상 소득층(63.2%)에서 특히 높았음.
- ⇒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는 평가는 ▶광주/전라(43.1%), 대구/경북(44.4%) ▶50 대(45.1%), 60 대이상(50.7%) ▶주부(45.4%) ▶100 만원이하 소득층(45.9%), 101-200 만원 소득층(45.5%) ▶중졸이하(41.4%), 고졸(40.0%)에서 높게 나타남.

10.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평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 평가, '안된다' 57.3% vs. '필요하다' 36.6%

Q 무상 복지정책 확대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	57.3%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증세가 필요하다	36.6%
모름/무응답	6.1%

-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필요성에 대해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57.3%로, '필요하다(3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	증세가 필요하다			사례수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	증세가 필요하다
전체		(1000)	57.3	36.6	전체		(1000)	57.3	36.6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53.7	40.3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54.7	41.7
	대전/충남/충북	(102)	62.0	30.4		자영업	(172)	57.5	35.5
	광주/전남/전북	(103)	56.6	33.7		블루칼라	(119)	53.6	43.4
	대구/경북	(103)	64.4	29.8		화이트칼라	(237)	55.2	41.4
	부산/울산/경남	(157)	60.9	35.7		가정주부	(232)	62.3	29.8
	강원/제주	(41)	58.6	34.5		학생	(103)	61.0	30.6
						무직/기타	(98)	51.6	38.5
연령별	19-29 세	(181)	61.4	32.3	지	새누리당	(413)	56.8	36.7
	30 대	(196)	55.5	40.1	지	새정치민주연합	(215)	55.3	40.7
	40 대	(215)	58.0	38.4	정	정의당	(37)	32.0	66.4
	50 대	(195)	61.7	31.8	당	지지정당없음	(307)	62.4	29.5
	60 대이상	(213)	50.6	39.5	별				

- ⇒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대전/충청(62.0%), 대구/경북(64.4%), 부산/울산/경남(60.9%) ▶여자(62.0%) ▶20 대(61.4%), 50 대(61.7%) ▶주부(62.3%), 학생(61.0%) ▶201-300 만원 소득층(64.3%)에서 특히 높았음.
- ⇒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서울/인천/경기(40.3%) ▶남자(42.6%) ▶30 대(40.1%) ▶블루칼라(43.4%), 화이트칼라(41.4%) ▶101-200 만원 소득층(49.9%)에서 비교적 높았음.

☞ **TNS Point**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여론(%)

SBS-TNS 대통령 취임 6개월 조사 (2013년 8월 22일-23일)	세부담 수용 가능하다	세부담 수용 불가능하다
	48.1	48.1
본조사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
	36.6	57.3

- ⇒ 박대통령 취임 6개월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자신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똑같이 48.1%로 참여하게 맞서고 있었음. 하지만 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 질문에서 '증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남.
- ⇒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해 온 상황에서 최근 들어 '증세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증세가 곧 가계의 부담 증가로 받아 들여지며 부정적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11. 공무원 연금 개혁 평가

공무원 연금 개혁 평가, '찬성' 65.8% vs. '반대' 27.8%

Q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퇴직 후 수령액은 지금보다 줄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32.9%	찬성 : 65.8%
비교적 찬성한다	32.9%	
비교적 반대한다	18.7%	반대 : 27.8%
매우 반대한다	9.1%	
모름/무응답	6.4%	-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65.8%로, '반대(27.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찬성	반대			사례수	찬성	반대
전체		(1000)	65.8	27.8	전체		(1000)	65.8	27.8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66.1	26.9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79.5	9.5
	대전/충남/충북	(102)	69.8	22.4		자영업	(172)	69.9	23.0
	광주/전남/전북	(103)	63.8	28.2		블루칼라	(119)	65.4	30.6
	대구/경북	(103)	64.4	33.0		화이트칼라	(237)	59.8	37.9
	부산/울산/경남	(157)	65.9	30.2		가정주부	(232)	67.7	23.3
	강원/제주	(41)	61.2	28.8		학생	(103)	55.9	38.0
						무직/기타	(98)	75.6	13.3
연령별	19-29 세	(181)	56.0	37.5	지정당별	새누리당	(413)	75.7	19.4
	30 대	(196)	59.8	36.5		새정치민주연합	(215)	62.3	33.4
	40 대	(215)	66.9	26.8		정의당	(37)	46.3	48.9
	50 대	(195)	71.0	23.2		지지정당없음	(307)	59.2	30.9
	60 대이상	(213)	73.9	16.7					

- ⇒ '찬성'은 ▶대전/충청(69.8%) ▶50 대(71.0%), 60 대이상(73.9%) ▶자영업(69.9%) ▶100 만원이하 소득층(68.9%), 101-200 만원 소득층(71.0%), 401 만원이상 소득층(70.7%) ▶고졸(71.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반대'는 ▶대구/경북(33.0%) ▶20 대(37.5%), 30 대(36.5%) ▶화이트칼라(37.9%), 학생(38.0%) ▶201-300 만원 소득층(32.7%), 301-400 만원 소득층(32.7%) ▶대재이상(3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12. 현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평가

현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평가, '정당한 판결' 55.8%

Q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따라 내린 정당한 결정이다	55.8%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다	32.0%
모름/무응답	12.2%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따라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55.8%로 과반수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사례수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전체		(1000)	55.8	32.0	전체		(1000)	55.8	32.0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55.0	34.2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80.4	15.3
	대전/충남/충북	(102)	57.8	25.2		자영업	(172)	52.3	39.5
	광주/전남/전북	(103)	32.8	52.2		블루칼라	(119)	49.7	30.8
	대구/경북	(103)	69.1	15.2		화이트칼라	(237)	47.4	47.3
	부산/울산/경남	(157)	61.8	28.9		가정주부	(232)	62.1	22.6
	강원/제주	(41)	62.8	25.9		학생	(103)	44.3	31.2
						무직/기타	(98)	78.4	12.0
연령별	19-29 세	(181)	45.3	33.9	정당별	새누리당	(413)	86.2	6.7
	30 대	(196)	33.9	53.0		새정치민주연합	(215)	35.8	55.8
	40 대	(215)	47.5	43.8		정의당	(37)	4.3	87.5
	50 대	(195)	71.0	21.5		지지정당없음	(307)	37.5	40.1
	60 대이상	(213)	79.5	8.7					

- ⇒ '정당한 결정'은 ▶대구/경북(69.1%), 부산/울산/경남(61.8%) ▶50 대(71.0%), 60 대이상(79.5%) ▶주부(62.1%) ▶100 만원이하 소득층(65.3%), 101-200 만원 소득층(68.8%) ▶중졸이하(71.1%), 고졸(65.6%) ▶새누리당 지지층(86.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2.5%)에서 특히 높았음.
- ⇒ '잘못된 결정'은 ▶광주/전라(52.2%) ▶30 대(53.0%), 40 대(43.8%) ▶자영업(39.5%), 화이트칼라(47.3%) ▶301-400 만원 소득층(45.2%), 401 만원이상 소득층(41.0%) ▶대재이상(42.7%) ▶새정치연합 지지층(55.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3. 통진당 의원직 상실 결정 평가

통진당 의원직 상실 결정 평가, '상실해야 한다' 56.2%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color: #002060; margin: 0;">Q</p> <p style="margin: 0;">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소속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만큼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56.2%</td> </tr> <tr> <td style="padding: 5px;">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만큼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37.0%</td> </tr> <tr> <td style="padding: 5px;">모름/무응답</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6.8%</td> </tr> </table>	소속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만큼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	56.2%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만큼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	37.0%	모름/무응답	6.8%
소속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만큼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	56.2%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만큼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	37.0%						
모름/무응답	6.8%						

-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한 것에 대해 '소속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만큼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이 56.2%로 '의원직 유지(37.0%)' 여론보다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국회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			사례수	국회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1000)	56.2	37.0	전체		(1000)	56.2	37.0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58.5	35.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58.9	31.9
	대전/충남/충북	(102)	46.8	46.2		자영업	(172)	50.6	45.2
	광주/전남/전북	(103)	36.8	56.4		블루칼라	(119)	56.5	35.0
	대구/경북	(103)	68.4	26.6		화이트칼라	(237)	52.0	44.3
	부산/울산/경남	(157)	54.8	35.7		가정주부	(232)	64.5	29.2
	강원/제주	(41)	75.1	18.0		학생	(103)	45.6	41.0
						무직/기타	(98)	65.9	22.7
연령별	19-29 세	(181)	50.1	38.8	지정당별	새누리당	(413)	82.1	13.7
	30 대	(196)	40.4	55.1		새정치민주연합	(215)	32.0	64.1
	40 대	(215)	49.9	44.9		정의당	(37)	13.8	74.8
	50 대	(195)	69.4	26.4		지지정당없음	(307)	45.3	42.1
	60 대이상	(213)	70.2	20.4					

- ⇒ '의원직 상실' 의견은 ▶대구/경북(68.4%) ▶50 대(69.4%), 60 대이상(70.2%) ▶주부(64.5%) ▶100 만원이하 소득층(63.9%), 101-200 만원 소득층(66.4%), 201-300 만원 소득층(60.2%) ▶중졸이하(63.9%), 고졸(59.8%) ▶새누리당 지지층(82.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8.7%)에서 특히 높았음.
- ⇒ '의원직 유지' 의견은 ▶대전/충청(46.2%), 광주/전라(56.4%) ▶30 대(55.1%), 40 대(44.9%) ▶자영업(45.2%), 화이트칼라(44.3%) ▶301-400 만원 소득층(48.0%), 401 만원이상 소득층(45.1%) ▶대재이상(42.5%) ▶새정치연합 지지층(64.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4.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신뢰도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신뢰하지 않는다' 65.0%

Q '정윤희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찰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5.9%	신뢰 : 26.3%
비교적 신뢰한다	20.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8.9%	신뢰하지 않음 : 65.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6.1%	
모름/무응답	8.7%	-

- 응답자 3명 중 2명(65.0%)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별로+전혀)'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신뢰	신뢰하지 않음			사례수	신뢰	신뢰하지 않음
전체		1000	26.3	65.0	전체		1000	26.3	65.0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25.9	65.8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41.2	39.3
	대전/충남/충북	(102)	24.8	66.6		자영업	(172)	29.4	65.0
	광주/전남/전북	(103)	13.0	77.8		블루칼라	(119)	21.2	71.0
	대구/경북	(103)	31.0	59.0		화이트칼라	(237)	16.0	80.3
	부산/울산/경남	(157)	32.7	58.8		가정주부	(232)	29.5	57.1
	강원/제주	(41)	31.4	59.2		학생	(103)	21.5	75.2
						무직/기타	(98)	44.4	38.5
연령별	19-29 세	(181)	21.4	74.6	지지당별	새누리당	(413)	46.6	41.1
	30 대	(196)	9.6	84.7		새정치민주연합	(215)	14.4	83.4
	40 대	(215)	18.9	78.8		정의당	(37)	1.5	91.8
	50 대	(195)	32.0	56.1		지지정당없음	(307)	11.6	78.9
	60 대이상	(213)	47.8	33.3					

- ⇒ '신뢰한다'는 ▶ 대구/경북(31.0%), 부산/울산/경남(32.7%) ▶ 50 대(32.0%), 60 대이상(47.8%) ▶ 자영업(29.4%), 주부(29.5%) ▶ 새누리당 지지층(46.6%)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신뢰하지 않는다'는 ▶ 광주/전라(77.8%) ▶ 20 대(74.6%), 30 대(84.7%), 40 대(78.8%) ▶ 블루칼라(71.0%), 화이트칼라(80.3%), 학생(75.2%) ▶ 새정치연합 지지층(83.4%), 무당층(78.9%) ▶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7.7%)에서 특히 높았음.

14-1. 검찰 수사 불신 시 추가 조치 방안(base: 수사 불신층 650명)

검찰 수사 불신 시 추가 조치 방안, '특검' 38.0%, '인적 쇄신' 33.8%

Q (문14 ③④응답자만)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검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	38.0%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18.6%
추가 조사보다는 청와대 내부의 인적 쇄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3.8%
모름/무응답	9.6%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향후 해결 방안을 질문한 결과, 38.0%는 '특검을 통한 추가 수사'를 꼽았으며, 33.8%는 '추가 조사보다는 청와대 내부의 인적쇄신을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18.6%)'는 의견까지 합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편이었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특검	국회 조사	인적 쇄신			사례수	특검	국회 조사	인적 쇄신
전체		650	38.0	18.6	33.8	전체		650	38.0	18.6	33.8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325)	34.7	17.6	36.4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13)	33.2	21.3	45.5
	대전/충남/충북	(68)	48.5	9.3	34.7		자영업	(112)	41.5	21.5	24.1
	광주/전남/전북	(80)	46.8	16.2	28.6		블루칼라	(84)	46.9	11.6	34.7
	대구/경북	(61)	38.8	20.7	35.8		화이트칼라	(190)	40.4	18.3	37.3
	부산/울산/경남	(92)	37.7	26.9	25.5		가정주부	(132)	31.9	12.8	36.1
	강원/제주	(24)	23.2	29.7	38.9		학생	(77)	34.8	31.0	29.2
연령별	19-29 세	(135)	33.6	25.6	32.5	당별	무직/기타	(38)	28.8	18.5	38.1
	30 대	(166)	47.8	18.9	28.1		새누리당	(170)	23.7	20.3	45.6
	40 대	(169)	37.9	20.0	30.2		새정치민주연합	(180)	51.4	18.7	23.3
	50 대	(109)	36.0	12.1	42.1		정의당	(34)	56.7	16.3	27.0
	60 대이상	(71)	26.9	11.4	44.9		지지정당없음	(242)	36.6	17.2	34.1

- ⇒ '특검'은 ▶대전/충청(48.5%), 광주/전라(46.8%) ▶30 대(47.8%) ▶자영업(41.5%), 블루칼라(46.9%) ▶새정치연합 지지층(51.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6.4%)에서 특히 높았음.
- ⇒ '인적 쇄신'은 ▶50 대(42.1%), 60 대이상(44.9%) ▶화이트칼라(37.3%) ▶새누리당 지지층(45.6%)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5.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필요성 평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필요성 평가, '내년에 본격 논의해야' 45.5%

Q

2016년 총선까지는 큰 정치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에 국회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우므로 내년에 본격 논의해야 한다	45.5%
개헌 논의로 인해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외면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38.7%
모름/무응답	15.8%

- 개헌 논의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의를 미루기 어려우므로 내년에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로 '산적한 현안들이 외면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38.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내년에 논의 해야	개헌 논의 부적절			사례수	내년에 논의 해야	개헌 논의 부적절
전체		1000	45.5	38.7	전체		1000	45.5	38.7
지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43.4	40.4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38.8	48.2
	대전/충남/충북	(102)	53.3	31.4		자영업	(172)	42.1	43.9
	광주/전남/전북	(103)	44.4	41.2		블루칼라	(119)	52.9	34.5
	대구/경북	(103)	46.2	38.4		화이트칼라	(237)	49.9	42.1
	부산/울산/경남	(157)	50.3	34.8		가정주부	(232)	41.7	33.0
	강원/제주	(41)	34.0	44.8		학생	(103)	53.3	34.2
						무직/기타	(98)	35.7	40.3
연령별	19-29 세	(181)	50.4	38.1	정당별	새누리당	(413)	46.0	36.5
	30 대	(196)	36.8	52.3		새정치민주연합	(215)	50.3	43.7
	40 대	(215)	56.1	32.1		정의당	(37)	57.1	35.7
	50 대	(195)	44.2	38.6		지지정당없음	(307)	42.0	35.6
	60 대이상	(213)	40.0	33.3					

- ⇒ '내년에 논의해야'는 ▶대전/충청(53.3%), 부산/울산/경남(50.3%) ▶20 대(50.4%), 40 대(56.1%) ▶블루칼라(52.9%), 화이트칼라(49.9%), 학생(53.3%) ▶101-200 만원 소득층(49.6%), 401 만원이상 소득층(48.6%)에서 특히 높았음.
- ⇒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서울(46.4%) ▶남자(42.4%) ▶30 대(52.3%) ▶자영업(43.9%) ▶201-300 만원 소득층(45.2%), 301-400 만원 소득층(42.4%) ▶대재이상(43.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TNS DataBase** - 개헌 관련 여론 추이(%)

SBS-TNS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	반대한다
개헌에 대한 찬반	2002.12.29.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점)	82.1	12.3
	2007.1.9. (노무현 대통령 개헌 관련 대국민담화 시점)	48.4	42.6
	2010.12.28.~29. (이명박 대통령 집권3년차)	45.1	46.7
개헌 논의에 대한 찬반	2014.2.22.~23.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43.5	45.7
	본조사	45.5	38.7

- ⇒ 그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 보면 개헌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려 있는 것으로 보임
- ⇒ 본 조사에서 개헌 논의에 찬성한다는 의견(45.5%)이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 2 월 조사와 비교하면 '모르겠다'는 태도 유보층이 10.8%에서 15.8%로 늘어 났을 뿐 개헌 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님
- ⇒ 현재의 헌법 체계를 바꿀만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될 경우 시급한 국정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그에 못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16.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시 선호 제도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시 선호 제도, '4년 중임제' 36.6%

Q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꾼다면 어느 제도가 우리 나라에 가장 알맞은 제도로 보십니까?

4년씩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36.6%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맡고, 총리가 국내정치를 이끄는 분권형 대통령제	25.2%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운영하는 의원 내각제	17.5%
모름/무응답	20.7%

- 개헌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경우가 36.6%로 가장 높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응답이 25.2%로 두 번째로 높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사례수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전체		(1000)	36.6	25.2	17.5	전체		(1000)	36.6	25.2	17.5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38.1	26.2	16.9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3)	44.2	35.8	9.1
	대전/충남/충북	(102)	32.3	24.5	17.7		자영업	(172)	43.6	25.7	13.2
	광주/전남/전북	(103)	25.0	29.6	20.8		블루칼라	(119)	39.2	26.5	19.9
	대구/경북	(103)	38.2	25.0	15.3		화이트칼라	(237)	39.7	21.2	22.5
	부산/울산/경남	(157)	43.8	20.0	16.9		가정주부	(232)	29.2	24.9	16.8
	강원/제주	(41)	26.9	24.3	23.2		학생	(103)	25.2	27.4	22.7
						무직/기타	(98)	41.3	25.2	10.4	
연령별	19-29 세	(181)	30.7	26.1	18.9	정당별	새누리당	(413)	46.0	24.6	12.9
	30 대	(196)	32.0	23.5	27.0		새정치민주연합	(215)	27.7	33.3	25.3
	40 대	(215)	37.4	23.2	20.0		정의당	(37)	45.2	28.4	20.0
	50 대	(195)	44.3	30.0	9.6		지지정당없음	(307)	28.9	19.7	18.3
	60 대이상	(213)	38.0	23.6	12.3						

- ⇒ '4년 중임제'는 ▶부산/울산/경남(43.8%) ▶남자(46.3%) ▶50대(44.3%) ▶자영업(43.6%) ▶401만원이상 소득층(44.6%) ▶새누리당 지지층(46.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5.8%)에서 특히 높았음.
- ⇒ '분권형 대통령제'는 ▶광주/전라(29.6%) ▶101-200만원 소득층(32.9%), 201-300만원 소득층(29.8%) ▶새정치연합 지지층(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의원 내각제'는 ▶30대(27.0%) ▶화이트칼라(22.5%), 학생(22.7%) ▶301-400만원 소득층(25.7%) ▶대재이상(22.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TNS DataBase - 개헌 시 적합한 권력 구조(%)

SBS-TNS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개헌 반대 (단임제 유지)
2004.2.28~29.	35.1	30.2	23.1	-
2005.2.22.	36.9	26.5	24.5	-
2006.9.28.	44.0	12.5	6.2	30.5
2008.6.1.	34.3	11.5	9.8	32.2
2014.2.22~23.	44.3	24.0	14.5	-
본조사	36.6	25.2	17.5	-

*2006 년과 2008 년 조사에서는 현행 5 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개헌에 반대한다는 보기가 포함되어 있음

- ⇒ 조사 시점 당시의 개헌 논의 진전 수준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권력 구조 선호도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순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올해 2 월 조사와 비교하면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44.3%에서 36.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내년도 개헌 논의 찬반별 개헌 시 선호 권력 구조(%)>

	사례수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개헌 논의 찬성	455명	39.8	28.6	16.5
개헌 논의 반대	387명	38.9	25.9	21.5

- ⇒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층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반면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17.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반기문 포함 시, '반기문' 17.5% vs. '문재인' 14.4%
 반기문 제외 시, '문재인' 17.0% vs. '박원순' 12.6%

Q

문) 다음 불러 드리는 인물 중에서 차기 대통령 감으로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문) 앞서 불러드린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경우,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만일 반기문 총장을 제외한다면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포함 시	반기문 제외 시
반기문	17.5%	-
문재인	14.4%	17.0%
박원순	11.1%	12.6%
김무성	8.5%	10.4%
김문수	5.1%	6.1%
안철수	3.8%	4.1%
정몽준	3.5%	4.9%
남경필	0.9%	1.3%
안희정	0.6%	0.9%
원희룡	0.6%	0.6%
기타	1.5%	1.6%
없음/모름	32.5%	40.5%

-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17.5%로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문재인(14.4%), 박원순(11.1%), 김무성(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기문 총장의 입장(대선 여론조사 제외 요청) 표명대로 반 총장을 제외하고 질문할 경우, 문재인(17.0%), 박원순(12.6%), 김무성(10.4%)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주자들의 선호도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반기문 포함 시 선호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반기문	문재인	박원순	김무성	김문수	안철수
전체		(1000)	17.5	14.4	11.1	8.5	5.1	3.8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17.1	15.7	10.9	7.4	6.2	4.5
	대전/충남/충북	(102)	18.2	11.6	12.6	7.8	3.4	2.5
	광주/전남/전북	(103)	20.0	19.0	21.4	3.6	0.0	4.0
	대구/경북	(103)	19.2	3.3	10.2	10.9	7.1	1.1
	부산/울산/경남	(157)	14.0	17.9	6.0	15.1	4.7	3.5
	강원/제주	(41)	24.8	9.1	4.9	4.0	6.0	5.4
성별	남자	(493)	17.8	14.9	11.8	7.6	7.3	3.9
	여자	(507)	17.3	13.9	10.3	9.3	3.0	3.7
연령별	19-29 세	(181)	17.3	26.3	9.9	1.4	2.1	7.4
	30 대	(196)	17.1	22.8	20.0	2.1	2.7	2.5
	40 대	(215)	18.5	16.9	10.4	6.6	3.6	4.0
	50 대	(195)	17.9	4.0	10.2	12.3	8.4	4.1
	60 대이상	(213)	16.8	3.7	5.3	18.6	8.4	1.2
지지당	새누리당	(413)	20.8	2.0	2.3	17.9	9.8	1.7
	새정치민주연합	(215)	12.9	35.1	22.1	2.0	2.1	7.2
	정의당	(37)	18.9	33.6	37.6	0.0	0.0	0.0
	지지정당 없음	(307)	16.4	13.7	11.0	2.1	1.6	3.7

- ⇒ '반기문' 선호도는 거의 모든 응답층에서 1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20.8%,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12.9% 등 여야를 넘나들며 고른 지지를 얻고 있음
- ⇒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기문 총장(20.8%)과 김무성 대표(17.9%) 간 2 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의원(35.1%), 박원순 시장(22.1%)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안철수 의원 선호도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도 반기문 총장에게 뒤지는 등 최근 들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약화된 상태로 보임.

【 반기문 제외 시 선호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문재인	박원순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안철수
전체		(1000)	17.0	12.6	10.4	6.1	4.9	4.1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4)	18.4	12.2	8.6	7.4	4.7	4.9
	대전/충남/충북	(102)	12.5	15.1	10.9	3.4	5.6	2.5
	광주/전남/전북	(103)	25.3	23.8	7.0	0.0	2.1	4.0
	대구/경북	(103)	4.9	12.6	11.6	9.7	7.0	1.7
	부산/울산/경남	(157)	18.6	6.4	17.8	5.2	5.9	4.0
	강원/제주	(41)	14.0	4.9	9.5	6.0	3.9	5.4
성별	남자	(493)	17.3	14.3	9.8	8.1	3.7	4.2
	여자	(507)	16.6	10.9	11.1	4.1	6.2	4.1
연령별	19-29 세	(181)	29.5	11.4	2.8	2.1	3.8	8.2
	30 대	(196)	26.1	22.4	2.9	2.7	2.8	2.9
	40 대	(215)	22.0	11.3	7.4	4.6	4.4	4.4
	50 대	(195)	4.0	13.0	15.3	10.0	6.5	4.5
	60 대이상	(213)	4.6	5.3	22.4	10.4	7.0	1.2
지지당	새누리당	(413)	2.1	3.3	21.9	11.8	9.6	1.9
	새정치민주연합	(215)	41.5	24.5	2.7	2.6	2.3	7.2
	정의당	(37)	42.0	37.6	0.0	0.0	0.0	3.8
	지지정당 없음	(307)	15.9	12.7	2.3	1.6	1.5	4.1

- ⇒ 반기문 총장을 제외할 경우, 문재인 의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 대 이하 연령층과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 ⇒ 50 대 이상과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김무성 대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TNS Point - 반기문 총장 제외 질문 시 기존 반기문 지지층의 이동

	%	소속
문재인	14.2	야
김무성	11.4	여
박원순	8.5	야
정몽준	8.0	여
김문수	5.1	여
남경필	2.3	여
안철수	2.3	야
안희정	1.7	야
원희룡	0.0	여
기타	0.6	
없음/모름	46.0	
합계	100.0	

- ⇒ 반기문 총장을 선택했던 175 명의 응답자가 반기문 총장을 제외했을 경우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지 분석한 결과임
- ⇒ 그 결과 문재인 의원을 선택한 경우가 14.2%, 김무성 대표를 선택한 경우가 11.4%로 다른 대권 주자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반 총장 대신 다른 인물을 고르지 않은 층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대권 주자를 여·야로 묶어서 반기문 지지층의 선호도를 합산해 보면, 여권 주자로 바꾼 경우가 26.7%, 야권 주자로 바꾼 경우가 26.7%로 같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 만일 반기문 총장의 대선 행보가 현실화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8. 정당지지도

'새누리당' 41.3% vs. '새정치민주연합' 21.5%

Q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
41.3%	21.5%	3.7%	2.8%	30.7%

-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지지도가 41.3%로 새정치연합(21.5%)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사례수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사례수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전체		(1000)	41.3	21.5	전체		(1000)	41.3	21.5
권역 별	서울/인천/경기	(494)	39.1	20.6	직 업 별	농업/임업/어업	(33)	77.7	9.8
	대전/충남/충북	(102)	39.4	23.0		자영업	(172)	41.0	23.1
	광주/전남/전북	(103)	12.7	42.3		블루칼라	(119)	32.7	29.5
	대구/경북	(103)	58.0	11.5		화이트칼라	(237)	29.1	21.6
	부산/울산/경남	(157)	54.4	15.9		가정주부	(232)	52.1	23.8
	강원/제주	(41)	51.6	23.4		학생	(103)	25.9	20.6
						무직/기타	(98)	61.1	10.3
연령 별	19-29 세	(181)	24.4	26.0	소 득 별	100 만원이하	(129)	60.1	14.3
	30 대	(196)	17.4	32.7		101-200 만원	(114)	52.2	14.5
	40 대	(215)	29.7	26.5		201-300 만원	(183)	43.9	26.0
	50 대	(195)	61.0	12.5		301-400 만원	(145)	30.0	32.9
	60 대이상	(213)	71.2	10.8		401 만원이상	(282)	37.5	23.0

- ⇒ '새누리당' 지지도는 ▶대구/경북(58.0%), 부산/울산/경남(54.4%) ▶50 대(61.0%), 60 대이상(71.2%) ▶주부(52.1%) ▶100 만원이하 소득층(60.1%), 101-200 만원 소득층(52.2%) ▶중졸이하(69.7%), 고졸(45.5%)에서 특히 높았음.
-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광주/전라(42.3%) ▶30 대(32.7%) ▶블루칼라(29.5%) ▶201-300 만원 소득층(26.0%), 301-400 만원 소득층(3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TNS DataBase** : 정당지지도 추이 (%)

	조사 시점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 진보당	정의당	안철수 신당	무당층
2012 년	6 월 17-18 일	41.5	32.2	3.6	-	-	21.3
	9 월 19-20 일	38.9	33.8	1.9	-	-	24.5
	12 월 10-12 일	44.5	36.2	2.5	1.3	-	15.4
2013 년	2 월 20-21 일	48.2	29.8	2.0	1.3	-	18.4
	6 월 3-4 일	47.5	24.1	2.5	1.5	-	23.9
	8 월 22-23 일	44.3	24.2	2.5	1.2	-	27.7
	12 월 29-30 일	43.9	18.3	1.5	2.2	-	33.3
2014 년	2 월 22-23 일	43.9	15.7	0.9	0.6	15.6	23.1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통합 진보당	정의당	-	무당층
	5.17~19 (방송 3 사 공동)	43.2	27.4	4.5	1.9	-	21.1
	7.25~26 (TNS 자체 조사)	42.6	23.7	3.7	3.9	-	26.1
	9.26~27 (TNS 자체 조사)	45.3	19.8	2.5	2.4	-	30.0
	11.28~29 (TNS 자체 조사)	43.3	19.3	2.6	1.9	-	33.0
	본조사	41.3	21.5	-	3.7	-	30.7

*조사 시점 하단에 부가 설명이 없는 조사는 SBS-TNS 여론조사 결과임

⇒ 새누리당 지지도가 40%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 패배 이후 하락한 지지도를 회복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